

- 2 인사말 : 꺼지지 않는 촛불 \_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송미옥

### 상반기 사업

- 3 건약이 꿈꾸는 사회를 말하다, 2008년 건약포럼 \_ 조직국장 정동만
- 7 안정성팀,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하다 \_ 정책실 안전성팀 안정민
- 10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진행경과와 전망 \_ 정책실 접근권팀장 강경연
- 14 승리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지지는 않았지  
: 스프라이셀, 푸제온 투쟁을 돌아보며 \_ 사무국장 강아라
- 16 일반의약품 의약품 전환관련 7문 7답 \_ 조직국 약사사업팀장 황해평
- 20 의약품과 접근권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_ 정책실 접근권팀 정소원
- 23 2008년 상반기 주요활동

### <특집>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본다

- 26 건약, 일상 속에서 언론개혁의 촛불을 들다 \_ 회원 윤영철
- 33 이명박정부 이후를 준비하자 \_ 회장 송미옥
- 35 촛불의 사회적 의미, 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_ 부회장 천문호
- 40 광전 촛불 참가기 \_ 광주전남지부
- 42 대전 촛불 참가기 \_ 대전충남지부 김연희
- 44 2MB 진짜 쩌다! - 10대들의 이색구호로 돌아본 촛불집회 \_ 사무차장 이상호
- 46 이명박 정부에서의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_ 정책실장 신형근
- 51 촛불속의 건약 \_ 조직국 김수진
- 53 [기고]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삶의 기본권 \_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이소형

### 건약소식

- 57 신입회원 10문 10답 \_ 조직국 김태원
- 68 신입회원 이야기 \_ 전북 김철승 회원
- 69 건약, 참지식인을 보다-신입 상근활동가 인사 \_ 사무차장 이상호
- 71 건약 홈페이지 사랑방 베스트 7 \_ 조직국 박유정
- 79 소박한 삶이 세상을 구한다 \_ 대전충남지부 오민우

### 칼럼

- 82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진실일까?  
-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을 읽고 \_ 조직국 김수진

### 회원동정

- 83 회원 결혼소식

### 광고

- 84 건약 블로그

### 편집후기

- 85 조직국

# 꺼지지 않는 촛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송미옥

촛불이 없던 답답한 MB취임 초기 정중동하던 여성장애인 단체의 토론회 제목 “2MB 저용량 시대에 살아남기” 라는 기사 말머리를 보고 한참을 웃었다.

주관 단체의 이름에 새겨진 구성원들의 특징에서 보이듯이 어느 시대든 “살아남기”가 최우선 과제일 거 같은 구성원들의 유머와 권력에 대한 조롱이 개인적으로 답답한 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 자신에서 한줄기 소나기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나한테 촛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추진력을 얻은 한미 FTA.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확대예고.

한국민의 불건강 사회를 예고하는 SICKO.

더 이상의 표현방법이 없는 “어린지” 교육제도.

조각조각 사유재산으로 뜯겨나갈 전기 가스 수도 언론 등 내 일상을 떠받치는 생활필수 공공재의 악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곳에서 시작된 촛불은 첫날부터 우리를 억누르던 것들을 연료삼아 타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촛불은 유머가 되고 조롱이 되고 지식이 되고 이웃이 되었다. 초고속 인터넷 국가에서 정부의 저용량을 걱정하던 우리 시대 가장 어려운 친구들의 유머와 조롱은 그래서 촛불의 시작이나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촛불의 “밤” 과 달리 일상의 “낮” 은 촛불의 연료로 쓸어 모으기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번 회지에서 보여주는 기획물들은 바로 이런 촛불 든 밤과 일상의 낮을 오가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보여준다.

영양가 없는 한미 FTA 때문에 자국민의 건강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2MB답게 국민건강을 지켜야할 건강보험제도가 제약자본의 논리에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난타 당하는 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대안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사적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의 출현에 의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 앞에서 무력한 건강보험, 환자를 상대로 약장사를 하고 있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라면 전방위적인 자본의 공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이런 일상의 낮도 촛불의 연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퇴근 후에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간다. 시청이 안된다면 다시 청계광장으로 종각으로 신촌으로 강남역으로 어디든 갈 것이다.

이번 회지는 우리가 계속 촛불을 밝혀야할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 건약이 꿈꾸는 사회를 말하다, 2008년 건약포럼

조직국장 정동만



지난 1월 10기 건약이 출범하였습니다. 10기 건약에서는 그동안 조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회원들의 교양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건약포럼이라는 월례토론의 자리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포럼을 총 5차례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하였습니다.

건약포럼은 건약이 진보운동단체로서 앞으로 지향하는 사회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21세기 변화된 사회흐름에 맞게 우리의 이론적 내용들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얻고 자 각 국별로 진행하는 중심 사업 주제나 사회 정세에 대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건약회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이런 기획취지에 맞게 건약포럼은 아래와 같이 2008년 동안 진행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① 2월 포럼(2/29) : 건약이 생각하는 진보정당  
- 진보정당 건설의 역사와 오늘, 그리고 미래, 그리고 진보정당  
/ 윤영철 건약회원
- ② 3월 포럼(3/28) : 건약, 민주주의를 다시 말한다  
-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 현수미 건약정책위원
- ③ 4월 포럼(4/25) : 아파트 공화국 - 후마니타스 / 신형근 건약 정책실장
- ④ 5월 포럼(5/30) : 이코노믹 마인드 - 99%경제를 움직이는 1%심리의 힘  
/ 천문호 건약부회장
- ⑤ 6월 포럼(6/27) : 스웨덴의 약가제도과 추진과정을 통해 보는 한국약가제도의 개혁방향  
/ 건강보험공단 김성욱 박사
- ⑥ 9월 포럼(9/26) : 보건의료:사회생태적 분석을 위하여 - 공감출판사  
/ 정동만 건약 조직국장
- ⑦ 10월 포럼(10/24) : 사유재산권과 공공재 / 천문호 건약 부회장
- ⑧ 11월 포럼(11/28) : 의약품 특허제도 과연 필요한가?  
/ 건약 정책실 접근권팀



## 1. 첫 번째 건약포럼

건약이 생각하는 진보정당  
진보정당 건설의 역사와 오늘, 미래, 그리고  
진보정당 **윤영철** 건약회원



2007년 대선평가를 두고 한국사회의 유일한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대선패배 책임문제와

민주노동당의 향후 전망에 대한 조승수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 연구소장의 조선일보 인터뷰로부터 시작된 논쟁은 지난 8,90년대의 NL, PD논쟁을 다시 떠올리게 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논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중복주의 논란은 정작 핵심적인 진보정당의 발전과 혁신에 대한 생산적 논쟁보다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진보진영에 많은 반성과 고민을 던져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노회찬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탈당을 하고 진보신당을 창당함으로써 단일 진보정당은 이제 두 개의 정당이 진보의 앞날을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약에서는 “진보정당건설의 역사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첫 번째 건약 포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윤영철 건약회원님의 발제가 있었고 이후 진보정당의 앞날과 당시 참여했던 중복주의 논란,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 등을 두고 각 회원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포럼 이후 뒷풀이까지도 많은 회원들이 남아 토론을 계속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날 포럼에서는 진보정당 논쟁에 대한 건약의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회원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 2. 두 번째 건약포럼

건약, 민주주의를 다시 말한다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현수미** 건약정책위원

두 번째 건약포럼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날은 현수미 건약정책위원님이 “민주주의, 약자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이후출판사”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발제에서는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약한” 민주주의가 마치 유일한 민주적인 방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자본의 분배가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영역에서의 철저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정치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대항 실험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제 이후 총선에 대한 전망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실현과정, 그리고 소위 87년 체제라고 이야기 하는 현재 헌법에 기초한 민주적인 원리들이 과연 지금에도 가능한지, 대의제 민주주의 속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3. 세 번째 건약포럼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신형근 건약 정책실장



지난 4월 총선은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와 그 것이 앞으로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과 의미가 있을 지에 대한 의도로 4월 포럼은 “아파트공화국 / 후마니타스출판사” 라는 책을 가지고 신형근 정책실장님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지난 개발독재 과정에서 아파트의 성장과정, 현 시기에 아파트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의미와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갖고 있는 특이한 위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4월 총선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에 대해 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85㎡(25.7평형) 이상의 아파트만 사면 한나라당 지지자가 된다” 는 말이 실제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의 한나라당 승리로 확인된 지금의 현실에서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국민의 기형적인 열망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는 80년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친 386세대들의 기득권화와 그들이 부동산, 교육문제라는 개인적 이해에 매몰된 채 사회적 연대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후 세대들도 점차 개인의 이해에 매몰되는 현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투표가 계급적 이해로 발전되지 못하고 욕망의 정치로만 작동하고 있는데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으로 한국사회에서 “아파트” 라는 부동산이 그동안 얼마나 중

요하고 핵심적인 자산 가치로써 기능했으며 결국 사람들의 정치적인 행위까지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4. 네 번째 건약포럼

이코노믹 마인드  
99%경제를 움직이는 1%심리의 힘  
천문호 건약 부회장

네 번째 건약포럼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 4월 총선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선거이슈가 승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운동진영이 중요하



게 여기는 합리성과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새로운 이론에 대해 검토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기획 의도 하에 이날 포럼은 “이코노믹 마인드” 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라는 책을 중심으로 천문호 건약 부회장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감각/지각, 이성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리하고 근대의 기반이었던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판단하도록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에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실천하기 위한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날 포럼에서는 한참 달아오르고 있는 촛불집회와 맞물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의 전



혀 새롭고 창조적인 집회문화에 대한 분석과 불과 한 달 전 만 하더라도 조용하던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 사회 인식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열 띄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그 동안의 모습과 달리 운동진영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성에 놀랐던 촛불집회에서 보듯 운동진영이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 주목을 하고 소통과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문화적, 정치적 감수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5. 다섯 번째 건약포럼

스웨덴의 약가제도와 추진과정을 통해 보는  
한국약가제도의 개혁방향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박사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스웨덴 약가제도를 검토하고 공부해 보는 자리로 준비한 포럼이었습니다.

이 날 포럼은 스웨덴 약가제도에 대한 번역서를 출간하셨던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박사님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주제가 스웨덴 약가제도에 대한 세미나자리

여서 그런지 약계언론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웨덴의 경우 2002년에 도입한 신약 상환여

부 결정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 및 최저가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의무대체조제 등의 정책을 통해 약제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약국, 환자에 대한 각각의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액 비중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실현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에

서는 의무대체조제 대상이 최저가 의약품으로 제한돼 제네릭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통비용이 낮음으로 인해 등재가격은 낮으면서도 제약사의 이윤은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제약사의 불만을 제어한 점도 주목할 만 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를 사회 생태적으로 바라보는 내용과 공공재에 대한 논점 정리 의약품 특허 등에 대한 주제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1년간 각 포럼의 발제문을 정리하여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건약포럼이 처음의 기획의도대로 회원들을 비롯한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고, 건약의 정책과 회원들의 진보적 생각을 살찌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1) 건약 홈페이지 [www.pharmacist.or.kr](http://www.pharmacist.or.kr) 건약소식 게시판 No. 153에 발제문 첨부
- 2) 건약 홈페이지 [www.pharmacist.or.kr](http://www.pharmacist.or.kr) 건약소식 게시판 No. 156에 발제문 첨부
- 3) 건약 홈페이지 [www.pharmacist.or.kr](http://www.pharmacist.or.kr) 건약소식 게시판 No. 157에 발제문 첨부
- 4) 건약 홈페이지 [www.pharmacist.or.kr](http://www.pharmacist.or.kr) 건약소식 게시판 No. 161에 발제문 첨부

# 안전성팀,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하다!

정책실 안전성팀 안정민

지난 2월부터 건약은 한 달에 한 번씩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약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의약품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약이 진짜 약으로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보건 의료인, 제약회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때문에 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야 합니다. 건약 회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약품이 있다면 게시판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약회사는 정말 필요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국가는 허가해준 의약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잘 검토하고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2008년 상반기에 건약이 문제제기한 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색경보 1호 보톡스]



건약의 첫번째 적색경보는 호흡곤란,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톡스였습니다. 보톡스는 대부분 안검경련이나 사시, 소아마비환자의 강직에 의한 침착기형(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굳어서 발이 발바닥쪽으로 구부러

져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기형)에 쓰이는 약으로 허가를 받았습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약들은 주로 눈 주름이나 팔자주름 등 얼굴 주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각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약청의 허가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OFF LABEL' 이라고 합니다. 즉 미용용도로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허가외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발표 후기

의사협회와 생산회사인 앨러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재에도 큰 파장 없이 여전히 주름제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톡스와 같은 오프라벨 사용과 오프라벨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문제 의약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한가지씩만 의견 말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 [적색경보 2호]



피임약, 구관이 명관! 3세대 피임약은 피임약의 일반적인 부작용인 여드름, 다모증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980년대 개발된 약입니다. 2세대와 비교해서 구역질, 울렁거림 등의 증상이

더 적고 피부 트러블도 적기 때문에 선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치명적일수도 있는 정맥혈전증의 경우 3세대 피임약은 2세대 피임약에 비해 정맥혈전 위험을 두 배나 증가시키는데 이는 미국 FDA도 이미 1995년에 인정했습니다.

야스민의 경우 3세대 피임약과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노제와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야스민은 혈중의 칼륨 농도를 높하게 됩니다. 이는 심각한 심장질환, 근육약화, 혈액의 산도 균형을 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상반기 사업

만약 피임약을 복용하시려면 최신약이 아닌 2세대 피임약을 1차로 선택하세요. 혹시 2세대 피임약을 드시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서 어떤 약제가 가장 본인에게 잘 맞는지를 다시 결정하세요.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할 때는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정맥혈전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특히 이 위험은 35세 이상 여성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 웨링의 “야스민” 이 정맥혈전증 위험이 2세대와 유사하다며 반박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건약이 야스민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다른 3세대와 달리 스피로노락톤계 이뇨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한 야스민이 혈중의 칼륨 농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심장질환, 근육약화, 혈액의 산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3호]

어린이 감기약 감기에 관한 농담같은 진담은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이 지나면 낫는다는 것이지요. 식약청에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감기약에 2세(24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과 용량을 삭제했습니다. 2세 미만 어린이에게 감기약을 먹일 어떤 근거도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기침 감기약을,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 사용을 권고

하지 않아 왔어요. 그러나 국내 감기약에는 3개월 영아에서부터 용량을 표시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소아에게도 약을 쉽게 먹일 수 있도록 해왔지요.

미국 FDA의 조사에 따르면 기침과 콧물에 쓰이는 약물들의 증상 완화 효과가 감기약과 가짜약(PLACEBO) 사이에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9월 28일 FDA는 1969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감기약 관련 6세미만 어린이의 사망사건이 123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충혈제(코막힘을 뚫는데 쓰임) 관련 사망 54건, 항히스타민제(재채기, 알러지에 쓰임) 관련 사망 68명, 대부분 2세 미만 어린이였습니다.

발표후기 : OTC 소아 감기약에서 2세미만 소아에 대한 판매가 자제되고 있지만 결국 그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감기약에 항생제까지 덩으로 받아오는 "한국만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기약 대신 병원이 아니라 우선은 휴식과 보살핌이라고 함께 알려주는 공익광고 약사가 되어봅시다

###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4호]

#### ADHD 약물치료, 쉽지만 위험한 선택.

ADHD 치료제에 관한 문제는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ADHD라는 질병의 정의, 진단법, 약물 자체의 안전성 문제, 치료 범위의외에 사용하는 오남용 문제까지 포괄적이었습니다.

#### 1. ADHD라는 질병의 정의에 관한 문제

ADHD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뇌피질에서의 대사 불균형 유전적 소인, 호르몬 이상, 환경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2. ADHD 진단법에 관한 문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DSM-IV은 주로 미국에서 쓰이는데 미국에서 이진단법을 사용하는 어린이 20명 중 1명 꼴로 ADHD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더 엄격한 진단법을 사용하여 약 200명 중 1명이 ADHD로 진단을 받습니다.

### 3. ADHD 약물의 안전성 문제

3-1)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콘스타 등)는 뇌속의 도파민 농도를 높임으로써 효과를 냅니다. 이 약은 중독성의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는 코카인 아편과 같은 레벨인 약물남용 위험 2등급.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약을 제 1종 향정신성약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심박동수와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주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살 충동, 우울증 등 정신병적 부작용도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일부 아동들에게서는 심각한 성장 지연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3-2) 아토포세틴 제제 (스트라테라)이 약물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자살 충동입니다. 미국 FDA의 2005년 임상결과 발표에 따르면 스트라테라를 복용한 1357명 중 5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FDA는 자살충동에 관한 블랙박스 경고를 첨부하고 의료인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FDA는 심각한 간 손상도 경고했습니다.

4. “ADHD약이 공부잘하는 약?” 심각한 오남용 문제 : 일부 방송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다시피 ADHD 약물이 주의력을 향상시켜 공부를 잘하게 한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DHD 약물 사용량이 2002년 대비해서 2006년 21.2배나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발표 후기 : 여러 미디어에서 우려를 표명한 ADHD 문제에 대한 반성보단 반박을 안전망 확보보단 질환홍보를 택한 ADHD치료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안전성 확보가 아닌 시장확대라는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죠.



### [건의의 의약품 적색경보 5호]

####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2000년도 이전에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제제가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꽤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연구들은 연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연구모델설정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들 연구 대부분은 이 약들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글루코사민 효능을 광고하는데 널리 인용되고 있는 ‘GLUCOSAMINE SULFATE USE AND DELAY OF PROGRESSION OF KNEE OSTEOARTHRITIS’ 라는 논문은 2002년 발표되었습니다. 3년간에 걸쳐 위약과 글루코사민을 비교하여 관절 사이가 얼마나 좁아지는가를 조사한 이 연구는 글루코사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인용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연구는 일관성 없는 방식의 연구 모델 문제로 인해 비난에 직면합니다. 물론 이 연구의 스폰서는 전 세계적으로 글루코사민을 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Rotta 제약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지원한 임상 연구들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자사 제품에 불리한 연구 결과는 은폐하거나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발표하기도 하지요.

발표후기 : 의약품 효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상결과의 논문들이 그 근거가 되어주지요 하지만 자칫 임상결과를 왜곡하기 쉬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임상논문의 조종동만을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균형을 잡기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약품 정보를 우리는 알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의약품 적색경보도 그런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진행경과와 전망

정책실 접근 권팀장 강경연

## 1. 들어가며

작년 건약의 총준위에서부터 새 정부 출범이 아닌, 대신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는 실로 대단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큰 틀은 흔들지 않으리라는 게 대세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4개월의 시점에서 약제비정책의 흐름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12월 도입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은 말 그대로 적정하지 않은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규모는 총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제비 증가율은 매우 가파르다. 2001년 약 4조규모의 약제비는 2007년 9조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제도적인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소득증대로 인한 건강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증가율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초기 등재 시 높게 형성된 약가, 등재이후 약가인하제도의 부재, 사용량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의 주요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이러한 약가제도의 허술한 점을 개혁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적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신약 등재시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을 통한 적정한 가격으로의 등재, 사용량 증가 및 재평가에 의한 상한금액의 조정, 기등재 된 약제정비 등이다.

## 2. 사례로 본 약제비적정화방안 진행과정

2007년 한 해, 올 상반기 동안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제도시행 초기로써 정부와 제약사의 눈치보기 및 주도권 경쟁으로 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먼저, 신약의 등재상황은 이러하다. 포지티브제도에서의 2007년 1년동안 제약사의 100여개의 신청 품목 중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비급여 판정은 14개, 급여판정 25개 중 비급여판정은 2개(프리그렐, 비레드임, 프리그렐은 2008년에 급여등재됨), 급여판정은 8개 품목이다. 하지만, 2007년말 기준으로 심평원 경제성평가가 진행중인 품목이 70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 한해는 경과조치로 경제성 평가자료의 제출면제규정을 적용받아 실제적인



경제성평가로 급여가 결정된 품목은 ‘베시케이’ 뿐이다. 그러므로 올 하반기 이후에는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으로 보험에 등재되는 약물의 수가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포지티브하에서의 신약의 등재 및 약가결정이 한국의 약제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지켜봐야 한다.

중근당 ‘프리그렐’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사노피의 플라빅스와 관련하여 특허관련 공방이 치열했던 분야이고, 약가협상에서 정부 및 제약사의 주도권 경쟁 또한 치열했던 분야이다. 사노피의 플라빅스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클로피도그렐의 물질특허이후, 이성체특허, 황산염특허 등 후속특허를 획득하였고, 플라빅스의 제너릭개발사들은 후속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신청하였고, 특허심판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물론 사노피는 실결불복 소송청구를 신청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난 4년간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후속특허에 대한 무효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값싼 제너릭의 진입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프리그렐’은 그의 등재도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다. 2007년 2월 식약청의 허가이후에 변경시킨 개량신약으로서의 지위인정을 받기 위해 플라빅스의 84%수준에서 등재신청을 했다가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비급여판정을 받았다. 심평원의 입장은 약효가 동등한 제너릭이 있는 상황에서 제너릭보다 비싼 가격으로 약효가 동등한 개량신약을 등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중근당은 재평가를 요청하면서 그의 제시가격도 75%로 낮추었다. 이번에는 심평원에서는 급여판정을 받았으나, 공단의 약가협상에서 다시 협상이 결렬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공단의 입장은 효과의 개량성이 없는 약은 제너릭수준의 약가가 타당하다는 것이었다(플라빅스 제너릭은 29개가 등재된 상황이고, 가장 낮은 가격의 제너릭은 플라빅스의 30% 이다). 이러한 판정으로

‘중근당’을 비롯한 국내제약사들의 반발은 아주 거세었다. 국내개발 개량신약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국내제약사들의 숨통 끊어놓기라면서 드러눕는 제스처를 취했다. 의약품산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라는 반발에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현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칼자루를 쥐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내사가 아닌 다국적사와의 승부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프라이셀과 푸제온이 그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최근 약제 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되며 논란 끝에 결정된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사례를 보았을 때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아직은 허점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스프라이셀의 경우는 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사례였다.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혁신적 신약 규정에 의해 결정되었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고가로 약값이 결정된 것이다. 보험공단과 약제급여조정위원회도 제약회사가 제출한 가격을 근거로 소폭 가격을 인하하였을 뿐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보험공단은 신약약가결정시 OECD국가와 싱가포르, 대만의 약가를 참조한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신약의 진입속도가 매우 빨라 상당수의 신약의 가격비교 국가가 1-2개 국가이고 이 국가들은 소위 A7국가인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를 가격비교대상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아직까지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정부는 다국적사와의 싸움에서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푸제온의 공급사 로슈는 적정한 약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4년 보험등재이후 약 4년동안 한국에서 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이 결렬된 필수약제인 경우, 그의 공급을 책임져야하는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스프라이셀'의 가격도 제약사가 공급거부를 하지 않을 적당한 선에서 약가가 조정된 것이라고 약제급여조정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기등재약의 재평가 부분이다. 포지티브 이전의 의약품 등재 및 그 약가는 일관된 기준 없이 결정되었다. 그로 인해 약값은 지나치게 높고, 품목수는 21,000품목이나 되었다. 제도시행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미 생산, 미 청구 품목 5,500여개에 대한 급여삭제이후에도 그 품목 수는 15,000품목이 넘는다. (이 부분의 급여삭제도 부당하다는 제약사의 소송이 있었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급여삭제 정당 판결을 받았다.)

이것으로 볼 때, 기등재약의 목록정비가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게 될 지, 제약사의 반발은 또 얼마나 커질지 충분히 예측할 만하다.

올해 발표된 고지혈증 시범평가 결과에서는 약값의 약 30% 인하율이 제시되었다. 270개 고지혈증치료제의

한 해 총 청구액 규모는 3400억원에 달하는데 이미 보험으로 적용된 의약품 15,000여 품목 중 단 270개의 품목의 목록정비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손실은 연간 약 600억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연간 재정절감액이 600억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제약협회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으나 심평원 평가 조사와 방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보수적인 평가라고 밝히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면 약가인하율은 44-66%까지 떨어진다. 이 하나의 사례만을 살펴봐도 우리나라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원칙에 입각한 조속한 목록정비는 국민의 재정절감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고지혈증의 시범평가 결과가 반영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듯 하다. 평가결과가 제약사에 통보된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원래는 30일인데 제약사의 반발을 고려해서 2배로 연장한 것이다)이 지난 7월 19일날 마감되었다. 이의신청에서 대다수의 제약사는 약가인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다국적사는 소송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대한 방어가 이후 본 평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 3. 개선방안

신약의 등재결정 및 가격결정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경제성 평가지표, 비교약제 부분, 평가절차의 투명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성 평가에서 급여판정이후의 공단에서의 가격협상에서의 공단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 필수약제의 공급을 보장할 만한 제도적 장치 및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기등재약의 목록정비가 제대로, 조속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15000여품목이나 되는 목록정비야말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약의 가격결정에서의 비교기준도 기등재약이므로 기등재약의 약값이 높으면 새로 진입하는 약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기등재약의 정비 속도 및 정비수준에 따라 약값의 변화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재평가의 평가기준인 A7조정평균가는 바뀌어야 하며 사용량 초과로 인한 약가재평가 방법도 제고되어야 한다. 예상 사용량보다 30% 또는 60% 이상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부분이나, 고시금액의 10%로 인하하한을

정해놓은 지점도 바뀌어야 할 지점이다.

궁극적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목표달성은 사용량 통제로 가능한 부분이다. 신약의 진입약가가 인하되고 기등재약의 목록정비 및 재평가로 전체 약가가 인하되더라도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는 약가인하효과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총액예산제 및 처방가이드라인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정도이다. 그의 도입 초기라 할 수 있기에 앞에서 지적한 부분 이외의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 승리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지지는 않았지

## - 푸제온, 스프라이셀 투쟁을 돌아보며

사무국장 강아라

의약품 독점권·특허권, 환자 권리 투쟁 등을 이야기 하다 보면 누구라도 글리벡 투쟁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글리벡 투쟁 이후 5년이 지난 올 초에 스프라이셀 약가에 대응하기 위해 백혈병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약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리벡 투쟁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 내부에서 생겼고 그래서 인권단체, 에이즈 감염인 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여러 단체에 글리벡 투쟁 평가를 제안하였다.



글리벡 투쟁 평가까지 함께 할 수 있을거라 판단하고 우선 현안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은 로슈가 약가 때문에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로서 이 두 약제의 본질은 똑같다고 판단하여 공동 대응을하기로 하였다.



글리벡 투쟁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존재한다. 제약자본의 문제를 최초로 한국에서 드러냈다는 점, 보장성 강화를 이루어냈다는 점, 환자권리를 위해 환자들이 직접 투쟁에 나섰다는 점 등을 보통 글리벡 투쟁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한다. 또 한편에서는 실질적 약가 인하를 거의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 환자들의 주도권을 일정 부분 포기했다는 것, 제약사의 시혜적인 약가 지원을 받아들였다는 것 등을 글리벡 투쟁의 한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는 약가 투쟁에서 큰 획을 그었던 글리벡 투쟁을 한번쯤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평가를 기반으로 스프라이셀, 그리고 이후의 약가 투쟁을 진행해야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스프라이셀은 처음에 BMS가 요구했던 약 70,000원의 약가가 최종적으로 5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우리는 약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 55,000원도 환자들에게는 살인적이라는 것 등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은 이제 끝났으나 약가 산정 기준은 여전히 없고, 55,000원이라는 약값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푸제온은 여전히 로슈가 공급을 거부하고 있고,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복지부를 만났고 로



하지만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이 결렬되고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상황은 긴박해졌다. 우리는 스프라이셀 약가 투쟁을 하면서 그 내용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슈도 만났다. 복지부는 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가 두려워서 별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해냈고, 로슈 사장은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을 환자를 바로 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해냈다. 그 당당함 앞에서 우리가 어찌나 초라하고 무력해 보이던지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꼈다. 우리는 지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살인'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마저도 참으로 당당할 수 있는 '축복받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사회는 자본이 떡 지고 헝클어진 머리채 그대로 미친 듯 질주하도록 보장해주는 곳이고, 이 국가는 행여 그 분들을 가는 길에 한 점 걸림돌이라도 있을까 미리 싹싹 길 닦아주는 역할을 자임하는 곳이고,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TV에서는 불쌍하고 가난한 중증 환자들을 보여주며 ARS 1000원, 2000원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누르며 이렇게 험난한 세상이 그리 메마르지는 않았음을 확인한다. 이 사회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오롯이 그들만의 문제로 남고, 그들을 바라보는 '착한' 사람들의 난망함 또한 개인적인 기부로 해소하도록 강요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전화통 붙들고 ARS 번호를 꺾 꺾 누르는 것뿐일까.

하지만 우리는 전화통을 선택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는 지난한 싸움의 어느 지점에 서있는 것뿐이다. 연대 단체 활동가들 모두 자신이 지

치는 것보다 서로가 지칠까 두려워하던 어느 날 한 활동가가 말했다. 자신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그래.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 이기지 못하는 게 무어 그리 중요하겠는가. 갈수록 끈끈해지는 믿음과 단단함으로 무장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목표는 지금 전 세계 기업 이윤율 순위 최고를 자랑하는 제약산업의 등수를 2,3등 즈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윤을 조금만 덜 뽑아먹으라고 애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의약품을 우리 손에 넣을지, 넣지 않을지를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생명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비록 때로는 지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관련 7문 7답

조직국 약사사업팀



1. "진통제, 소화제, 박카스 정도는 슈퍼에서 팔아도 될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등도 위험하거나 특별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미국 FDA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한 해 약 200건의 의문사가 타이레놀 복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DA는 심한 음주 후의 복용이나 심한 통증에 대한 타이레놀의 과다 복용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 More Information

타이레놀과 관련된 부작용 연구 사례

1.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이 의학저널 '중독학 화학연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량의 진통제와 카페인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간이 손상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분해될 때 생기는 독성 부산물의 양을 커피의 카페인보다 3배까지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2. 하버드 의과대학과 보스턴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공동으로 이루어진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5,123명의 여성을 조사한 결과, 타이레놀이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미국심장협회지 '하이퍼텐션'(Hypertension)의 온라인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 51-77세의 연령군이 매일 500ml 이상의 아세트아미노펜 -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 1정을 복용한 경우 3년 내에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2배까지 높아질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3. 영국 노팅엄대학 등 4개 대학 공동연구팀은 1만 34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오래 복용하면, 천식은 물론 폐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가끔 복용하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19%, 매일 복용하는 사람은 94%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천식에 걸릴 위험도 가끔 복용할 경우 40%, 매일 복용할 경우 81% 증가했습니다.

- 아스피린도 주의사항을 확인 후 복용해야 합니다.

아스피린 성분은 혈액이 굳는 것을 지연시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므로, 기본적으로 출혈을 동반하는 질병, 예를 들어, 위궤양 등 장내출혈 환자, 혈우병 등 출혈성 질환자 등은 복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출혈 시 지혈작용을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복용을 하던 분들도 1주일 전부터는 복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More Information

##### 1. 아스피린과 관련된 주의사항

수두에 걸린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먹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뇌압이 올라가고 혼수상태에 빠지므로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에는 피를 묽게 하고 지혈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혈우병이 있거나 생리중인 여성은 신중히 복용해야 합니다.

뇌진탕 혹은 가벼운 머리부상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아이들이 퇴원 후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항응고제인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출혈의 위험을 높여, 심하면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2. 미국의 OTC 진통제 오용 이유

미국의 경우,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에 따르면 OTC 진통제는 몇 가지 이유로 오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OTC 의약품을 진짜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둘째 소비자들이 주성분을 인지 못함,

셋째 더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넷째 소비자들의 비현실적인 믿음.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성분에 대한 의약품설명서를 읽지 않고 두통, 알러지, 독감을 치료하기 위해 동시에 몇몇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박카스는 고혈압환자와 청소년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카스는 카페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고 카페인도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며 중추신경 흥분제나 이뇨제, 강심제, 진통제 등에 사용될 정도로 강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권장량대로 성인의 경우 하루 한 병 정도는 괜찮지만, 중독성을 보일 경우에는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혈압 상승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5세 이상이라는 복용기준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약청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품목의 성분에 근거해 제한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박카스가 약국의 판매로 된다면, 술과 담배처럼 나이제한을 지키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15세미만의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될 경우에 이를 어떻게 예방 할 수 있을지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2. 감기약도 오남용이 될 수 있나요?

미국 보건부(DHHS) 산하기구의 하나인 약물남용 정신보건국(SAMHS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2~25세 연령대 청소년 및 청년층 가운데 5.3%에 달하는 3,100만명 가량이 OTC 감기약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럽제나 정제 타입의 OTC 감기 치료제들은 효과적이고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량복용 할 경우에는 환각반응이나 육체적 이탈감, 시력손상, 육체적 조정능력 상실, 심한 복통, 구토, 폭력성을 동반하는 근육경련, 불규칙한 심장박동, 정신착란 등 갖가지 중증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어 오다 안전성문제로 식약청의 판매금



지 나 주의 조치를 받은 대표적인 의약품이 있나요?  
콘택600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4년 8월 1일 페닐프로판올아민 (PHENYLPROPANOLAMINE: 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의 사용, 제조,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회수,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대표적으로 콘택 600 과 동일성분 코감기 시럽류 등). PPA성분은 비강(코구멍)내의 혈관의 확장에 따른 비출혈 (코막힘 증상)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혈관수축기능의 성분인데, 이 혈관수축기능이 코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2세미만 영아 시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1월 24일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감기약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 료진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제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침약, 콧물약 등 감기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의약품 광고를 살펴보고 의약품을 복용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SANSGRY S 등은 미국 OTC 의약품 인쇄광고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50%의 광고가 정확도를 상실하였고 부작용은 단지 하나의 광고에만 있었으며 모든 광고는 정보제공의 목적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TC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광고를 할 경우 오히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04년 제약협회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 약 파문(일명 콘택600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신문, 잡지 등에 의약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는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조차 삭제하려고 하였습니다.

5. 일반의약품을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진통제나 소화제, 감기약(약국의 판매 논의가 추진되는 약품)등을 지속적으로 구입 시, 국민이 동네 단골약국에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구입이 이루어 질 경우, 단골약사는 일반약 복용 중단시기, 전문가 진료가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병의원 진료 등을 권유 하는 등의 최소한의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환자도 구입하면서 의문점이 있을 시 즉석에서 약품에 대한 상세설명과 복용지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 대한 투약요령이나, 임부 및 수유부, 노인 등에 대한 조언도 중요한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등 약국의 장소에서 대량, 반복 구입 시에는 전적으로 소비자 판단과 광고에 의존하여 결정이 이루어 질 개연성이 많을 것이며 제품 설명 등에 문의 사항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6.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의약품 관리체계에 있어 문제가 많나요?

영국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NHS) 산하기구인 약품 및 건강 상품 규제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MHRA)은 지난 3년간 영국에서 1만 3,000여 명이 의약품 부작용을 겪었으며, 이 중

3,00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04년 861명, 2005년 1000명 이상, 2006년 964명이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의 종류는 다양했으며, 일반의약품 중에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진통제의 복용으로 위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병원에서는 피 응고를 막는 와파린, 이노제 등의 부작용이 가장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MHRA의 준 레인 박사는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약의 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04년 907건에서 2005년 1841건, 2006년 2,467건, 2007년 3,75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2007년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3건, 2005년 61건, 2006년 62건으로 점 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명당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를 미국, 일본과 비교할 경우(2004년 기준), 한국은 19명인데 비해, 일본 237명, 미국 1,454명으로서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비율이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와 같은 차이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FDA와 일본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신약정보와 처방약 등에 대한 부작용과 그 사례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안전팀 몇 명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신약 등의 부작용 사례와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국민 안전을 지키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 7. 다른나라도 약국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나요?

\*유럽지역 약국의 판매 허용국가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라트비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12개 국가)

\*유럽지역 약국판매 불허용국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핀란드, 헝가리, 시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키아, 몰타 (16개 국가)

우리나라의 경우 1 약국 당 인구수가 2,400 여명 입니다. 반면, 영국은 5,631명, 스위스는 4,455명, 독일은 3,8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판매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근거로 제시되는 미국 역시 5053명으로 높은 편입니다. 한편, 약국 당 인구수가 3391명인 이탈리아와 2614명인 프랑스는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선진국에서도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1 약국 당 인구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에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약사회와 각 일반 약국에서는 야간, 주말이나 휴일에 의약품 구입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번약국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더불어 대중광고를 실시하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복약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 입니다.

1) 코메디닷컴 2007.12.28  
2) 코메디닷컴 2007.12.28  
3) dreamdrug.com 2007-10-29



## 의약품과 접근권

#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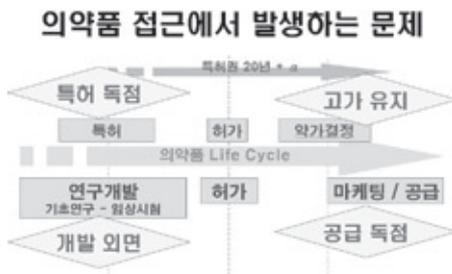
정책실 접근권팀 정소원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권’을 명시한 이래로, 인류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도 점점 깊어졌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헌장을 보자. 벌써 수십 년도 지난 문서에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라며 인류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우리의 건강권. 이것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시작하여 마땅한 예방서비스를 받을 권리, 좋은 주거 환경과 교육에 대한 권리까지를 포괄한다. 여기에, 건강에 있어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차이는 없어야 한다는 건강형평(HH)에까지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는 건강권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권인 ‘건강할 권리’를 의약품에 국한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질병에 걸렸을 때 그에 적절한 치료법으로서의 의약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종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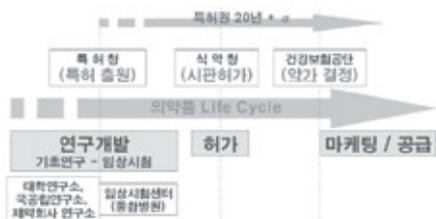
그런데 우리의 건강할 권리, 특히 의약품 접근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기업이 의약품에 대해 가진 권리, 지적재산권과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약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접근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살펴보자.



의약품은 대학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제약회사 연구소 등에서 기초연구를 거쳐 유효물질이 탐색되면 이에 대한 물질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이로써 특허를 인정받은 특허권자는 그로부터 20년의 독점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더불어 제약회사는 시판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이것은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병원 등 임상시험 센터에서 수행된다. 임상시험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고 나면 식약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지만, 보통 재정을 부담하는 기구(건강보험공단)의 약가결정제도 하에서 약가가 정해진 후 시판을 하고 마케팅이 시작된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환자로 하여금 약을 먹을 수 없게 하는’, 지점을 찾아보자. 우선 기초개발 단계에서 연구의 관심사가 돈이 되는 질환에 치우침으로써 소외된 질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허 출원 후에는 특허 독점기간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공급의 독점권을 매개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 약의 Life cycle



우리의 건강권, 의약품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 1) 개발되지 않는 의약품

◎ 효과 좋은 약이 아직 없다는데, 현대 과학기술로는 아직 어려운가봐?

☞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은 ‘약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선진국 국민들의 질병에 치우쳐 있다. 제3세계의 풍토병이나 말라리아, 결핵으로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 가도,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질환은 연구개발을 하지 않거나, 약이 있어도 판매하지 않기도 한다.

### 2) 너무 비싼 의약품

◎ 제약회사가 이리도 많은데 약값도 떨어지겠지... MP3나 노트북 가격도 몇 년 지나면 확실히 떨어지던걸?

☞ 여기에 바로 ‘특허’가 등장한다. 특허기간동안은 독점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노트북이나 MP3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의약품에서는 왜 문제인가? MP3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즉 신기술을 도입해 가격이 비싼 A사 제품을 사는 대신,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기본기능에 충실하면서 저렴한 B사 제품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폐암진단을 받은 내가, 폐암치료제가 비싸다고 해서 좀 더 값이 싼 폐결핵 치료제를 먹을 수 있느냐 말이다.

◎ 약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든다면? 약값이 비쌀만 하니가 그렇겠지.



☞ 제약회사에서는 의약품 개발에 ‘전문학적인’ 연구개발비가 든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는 질문에는 한 번도 답한 일이 없다. 사실 그 ‘연구개발비’에는 시민들의 세금과 공적자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에는 다양한 세금감면과 조세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기관과 공적자금들이 지원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9년 제약분야 R&D에 투자된 비용의 60%만이 제약회사가 부담한 것이었다. 그 뿐이 아니다. 제약사들이 ‘연구개발비’보다 ‘마케팅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요약해보자. 제약사들은 ‘전문학적인 비용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

◎ 제약회사도 돈 벌어 장사하는 곳인데, 개네도 남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 제약회사 수익률은 70년대 이래로 전 산업 1위다. 포춘지가 선정한 2001년 500대 기업 중에서, 1위였던 제약업의





수익률은 18.5%였던 반면, 500대 기업 수익률의 중간값은 3.3%에 불과했다. 2위인 금융업의 13.6%를 훨씬 넘어서 있다. 우리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정부의 보건재정이 제약회사를 살찌워왔다.

◎ 훌륭한 약을 발명하면 특허권을 인정해 줘야지, 연구를 안 하면 어떡해?

☞ 새로 개발되는 상당수의 의약품은 ‘훌륭한’ 약이 아니라, ‘열등하지 않은’ 약이다. 미국 FDA에서 1989-2001년에 허가받은 신규의약품 중 기존 치료제보다 ‘나아진’ 효과를 입증한 약은 24%에 불과했다. 물론 기존 치료제보다 나아진 것은 없지만, 신규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약가를 인정받는다.

### 3)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



◎ 외국에선 쓰고 있는 약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선 살 수가 없네?

☞ 제약회사는 특허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판매에 대한 결정, 공급에 대한 결정도 독점한다. 각 국가의 특허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에이즈 퇴치’ 등의 보건 프로그램이 이윤을 저해하기 때문에 출시를 거부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로슈가 에이즈치료제인 푸제

온을 3년째 판매하지 않고 있다. 주사제 한 병당 2만5천원, 1년에 1800만원인 우리나라 보험약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공급되지 않고, 너무나 고가여서 환자로 하여금 약을 먹을 수 없게 하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건강권과 배치되는 특허권, 그것을 이윤의 수단으로만 악용하는 제약회사들의 횡포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강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라 한다면, 의약품 접근권은 ‘효과좋은 약을, 적당한 가격으로 먹을 권리’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권리를 갖게 되었나고? 그것은 인류가 ‘건강할 권리’를 위해 싸워온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평생 감당해야 할 약값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백혈병 치료제, 그것의 가격인하와 강제실시를 주장하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리고 광우병 소고기를 먹지 않을 권리를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고, 그것을 호도하는 언론권력과도 계속해서 대적 중이다. 이런 싸움들이 우리의 건강할 권리를 바로 내 것이게 하는 과정이고, 의약품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손으로 되찾는 과정일 것이다



10) Michael E. Gluck, "Federal Policies Affecting the Cost and Availability of New Pharmaceuticals", 2002에서 재인용

11) Williams C., "Trends and Indicators in the Changing Health Care Market place, 2002

12) NIHCM, "Changing Patterns of Pharmaceutical Innovation", 2002

# 그 밖에 이런 일이...

## 2008년 상반기 주요활동

### 1월20일 중앙총회

1월 20일 서울의대 합춘회관에서 10기 출범을 위한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중앙 총회가 전국에 있는 회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부 홍세화선생님의 강연에 이어 2부에서 10기 건약 사업계획 보고와 회칙 개정, 집행부 인사, 회장 인준 등이 있었습니다.

### 1월25~27일 보건의료진보포럼

1월25~27일 동안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는 2008년 보건의료진보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보건연합 각 단체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이명박 정부를 맞이하면서 한국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5일에는 김신민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구 담당관이 '인권 문제로 본 보건의료 운동', 임준 가천의대 교수가 '세계 보건의료계 교육 제도와 한국 의료 교육의 현실과 전망', 김명희 을지대의 교수가 '베네수엘라와 맨발의 의사들'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26일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조직국장인 정동만회원이 '제약회사 포장된 휴머니즘'의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어 강신의 인제대의 교수가 '몸의 역사, 몸의 문화'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27일에는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가 '의료 산업화의 종착지, 미국 의료 제도와 2008 미국 대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신영전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이상이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소장,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 등이 '대선 이후 보건의료운동의 전망 : 무상 의료와 신자유주의의 충돌'이란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 2월26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10주년 국제세미나 참여



2월 26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노조 전환 10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영국, 미국, 일

본, 뉴질랜드와 국제공공노련(PSI)에서 노조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부에는 '각국 보건의료제도와 재정' 관련한 세션은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얼마나 잘못된 방향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내용으로 '각국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비교' 세션을 통해 보건의료 직종 간 임금 격차, 인력 기준, 비정규직 비율과 노동조건, 교대제 근무 방식,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2월 29일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북송식

2월 29일, 인천항에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제 59차 물자 북송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물자는 2008년 첫 물자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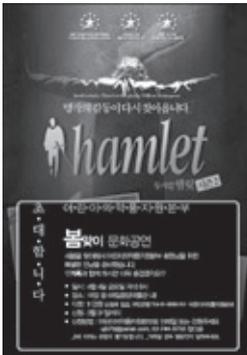
## 상반기 사업

송으로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에 필요한 철근 및 목재와 한미약품에서 기증받은 어린이 기침, 가래약 등 2억 3천만원 상당입니다. 59차 물자 복송식에서 임종철 이사장을 비롯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송미옥, 한미약품 박찬하, 서성교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 3월 15일 보건의료로 반전포럼

3월 15일에 진행되었던 보건의료반전포럼에서는 60명이 넘는 학생들과 사회인이 모여 “현장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되짚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제는 국제분쟁전문기자이자 프레시안 기획위원이신 김재명 선생님이 하였고 사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실의 이미진 회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테러를 보는 새로운 관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제국주의 국가들이 석유를 강탈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전쟁으로 이라크의 민중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셨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친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반전운동에 미치는 영향, 아프간 피랍 사태를 보는 관점, 탈레반 등 연일 다양하고 진지한 토론과 질문들이 오고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라크전쟁이 지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국 내에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다음날 있을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할 것을 공유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 4월 4일 햄릿공연 단체관람



4월 4일에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후원행사로 뮤지컬 햄릿 공연이 중앙박물관내 극장 “용”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건약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 5월 25일 전국 건약 상반기 행사



서울대학교병원 합춘회관에서 있었던 건약 전국 상반기행사에서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모여 한국사회의

진보의 희망에 관해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장)님의 강연을 듣고,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회원분들의 마음과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5월 27일 환자권리 심포지움

5월27일에는 건강세상 네트워크 주최로 제1회 환자권리주간행사 <환자, 권리를 말하다>가 열렸습니다. 의약품이 가격이 고가로 측정되는 이유인 연구/개발비에 대한 폭로와 공급 중단에 대해 과연 대책이 전무한 지에 대해 밝혀보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의약품 접근권 투쟁에서 환자들이 제약회사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건약에서는 정책실 정소원회원이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주발제를 하였습니다.



### 6월 8일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6.10항쟁 21주년을 이틀 앞둔 6월 8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는 인도주의실천

의사협회의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등 각계 각층의 보건의료인 200여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건의료인 5222명이 서명한 ‘제2의 6월 항쟁을 위한 보건의료인 5222인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

가한 보건의료인들은 선언에서 정부의 쇄고기 협상, 의료민영화 정책, 촛불시위 강경진압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청와대 앞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쇠고기협상 무효,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 날 선언에는 전체 5222명 선언인 가운데 약사, 약대생 1162명이 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 7월1일 로슈 기습 점거 투쟁



에이즈약 '푸제온'이 급여등재 후 3년째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약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회원들은 7월1일 서울 삼성동 로슈 본사에 기습점거 항의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참여한 회원들은 회사 곳곳에 "환자생명을 갖고 장난은 이제 그만! 약을 공급하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면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이 날 항의시위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푸제온 공급대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고 사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시해온 로슈측에 대한 환자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로슈는 환자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7월 5일 활동회원MT

시청앞 광장에서 국민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와 거리 행진을 마치고 10여명의 회원들이 늦은 밤 서울남산유스호스텔을 찾았습니다. 이날 MT에서 촛불이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해 조중동 불매운동, 향후 촛불의 방향에 관한 내용까지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 7월 8일 보건연합토론회

7월 8일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촛불과 민주주의, 보건의료인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의 촛불의 방향과



보건의료인의 역할, 촛불을 넘어 어떻게 의제를 확장할 것인가 등 토론이 이어진 이 날은 1부에서 반민생정책과 촛불의 요구-정태인, 조중동과 이명박/ 언론민영화와 민주주의-김서중, 왜 재협상일 수 밖에 없는가-우석균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2부는 보건연합 각 단체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건약에서는 변진옥 회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발제를 하였습니다.

### 7월 13일 약계연대 교양학교



13일(일) 오후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강당에서 있었던 '광우병쇠고기 재협상/의료민영화 저지/한미FTA저지를 위한 약계연대(약칭 약계연대)'의 첫 번째 교양학교가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1부 강연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의 광우병에 대한 이해에 이어 약가를 둘러싼 특허제도의 본질, 한미FTA, 의료민영화, 방송 등 공기업 사유화까지 폭넓은 주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이윤이나 생명이나'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며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촛불집회는 집에 있으면 에어컨, 전기 등을 켜 놓을 시간에 밖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으니 가장 환경친화적인 집회이고, 초와 비웃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어 중소기업을 살리는 집회인데 오히려 촛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한 2MB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농담 섞인 말씀으로 많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네 개조로 나뉘어 1부 강연에 대한 소감과 촛불집회를 본 자신의 생각들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뒷풀이 자리로 옮겨 학생들과 못다 나눈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교양학교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건약, 일상속에서 언론개혁의 촛불을 든다.

회원 윤영철

## 1. 촛불로 타오르는 언론개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인 약사로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 과 '의료의 민영화 반대' 를 한결같이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수구언론 조중동의 불공정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득을 주는 제약회사의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약국에서의 비록 작지만, 소중한 플뿌리 불매(不賣)운동을 함으로써 네티즌들이 연정당한 소비자주권 운동에 동참하고자 한다."

지난 6월23일 어느 때처럼 우리 건약의 입장에서는 평소와 다른없는 수준의 어찌보면 평범한 논평을 내었다. 하지만 그 반향은 엄청났다. 논평이 발표되자마자 건약 홈페이지에는 2-3일사이에 1500여건의 글들이 쇄도했으며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들이 쇄도했다. 이는 이제껏 건약이 겪어 보지 못한 일 들이었다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느라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는 지식인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행동하는 양심을 지켜나가는 약사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아이의 엄마)

함께 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청주맥)  
속이다 후련합니다. (UMBLUE)



이런 실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김영철)

'토론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아고라에는 단연 건약이 화두로 떠올랐고, 언론개혁운동 사이트의 회원들은 우리들의 논평을 다른 사이트로 퍼 나르기 시작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촛불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의 캠프데이비드별장의 숙박료로 지불된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의 문제에 대한 저항은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나 진보운동세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여중고생들의 자그마한 촛불로부터 시작되었다.

# 朝鮮日報

가냘픈 소녀의 손에 들린 1개의 촛불이 100여개의 촛불이 되고 수천개, 수만개, 수백만개의 촛불로 타올랐으며 마침내 이명박정권을 집어 삼킬 듯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보수세력과 조중동의 대변되는 수구언론들은 여느 때처럼 소위 "촛불배후론" "좌파선동론"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자신들에게 불길기 옮겨 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조각 뻗조각으로도 "광우병공포"를 떠들어 대던 그들이 "미국소는 값싸고 맛있고 안전하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었다. "바뀐 것은 정권 뿐"인데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 전 정권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런 그들의 급변한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중동의 해악을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인지시켰으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촛불은 청와대와 함께 조중동으로 향하게 했다.

수구언론에 대한 개혁운동은 1997년 강준만의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에서 시작된다. 안티조선운동은 1998년 최장집교수에 대한 월간조선의 사상검증에 대한 조선일보기자의 강준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홍세화가 한겨레신문 칼럼에 "나도 고발하라"라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2000년 안티조선 지식인선언운동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대중적인 운동으로서 자리를 못 잡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안티조선운동세력의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입장차가 안티조선운동진영 분열을 가져온 것이다. 변희재 같은 자들의 갑작스런 변절도 전선을 무너트리는데 일조를 하였다.

지금 수구언론과 조중동의 사설 홍신소 역할을 자임한 검찰들의 난동을 보면 그들의 위기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10여년의 언론개혁운동도 못해낸 일들을 불과 50여일 만에 촛불들이 해낸 것이다. 건약의 논평도 사실은 촛불과 네티즌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춤추는 구름'이라는 분이 '삼진제약과 조중동'이라는 글을 사랑방에 올린 것이 촉발하게 된 것이다.

6월10일을 기점으로 촛불이 주춤하는 사이에 경찰들을 몽둥이와 군화발, 물대포를 시민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했으며, 검찰과 수구언론들은 시민들을 폭도로 네티즌의 항의운동을 테러로 규정하며 본격적으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촛불들이 고립되어 가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을 때 건약의 논평이 나왔고 이는 언론개혁운동세력에게는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사범위가 광대했던 삼성특검에는 불과 4명의 검사들 동원했는데, 조중동 불매운동에는 무려 5명의 검사들을 동원하고, 모든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상식과 법리에 어긋난 권력남용을 그들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홈페이지는 "나도 잡아가라"는 실명의 글들이 매일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들을 "조선일보 서초지국"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임채진 검찰청장을 "서초지국장"이라고 놀리고 있다.

지금은 수구언론과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일대 격전의 지점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구언론이 권력자들을 앞세워 노골적인 이간질과 탄압도 그 강도를 더 해가면 더해 갈수록 국민들의 저항도 집요해질 것이다. 이는 그간의 언론개혁운동이 명망가 위주의 선언식 운동이었던 반면 시작과 발전이 풀뿌리부터 생겨난 운동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싹을 잘라내도 새로운 싹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촛불의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언론개혁운동은 민주주의운동의 시작이고 또한 완결이다.

## 2. 건약 언론개혁운동의 촛불을 들다.

건약은 언론개혁운동을 초창기부터 지원해온 몇 안 되는 운동단체 중에 하나라고 자부한다. 1997년 안티조선운동이 천리안과 하이텔 등의 건약 커뮤니티에서는 꾸준히 수구언론의 해악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다. 그리고 2000년 "조선일보기고 및 인터뷰 거부운동"에 참여했고, 그 이후로 건약은 조선일보에 기고는 물론이고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으며, 보도 자료의 배포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나 인터뷰금지에 대한 논란이 진보진영에서 크게 일어난 적이 있다. 강준만이 조선일보에 글을 실는 진보지식인에 대해서 "매판진보"라고 거세게 비판을 할 때에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 이유로는 조선일보 독자들에게도 진보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과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진보세력들이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즉 진보진영이 조선일보를 배척하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공간을 스스로 차단함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언론개혁 초창기에는 강준만같은 운동권과 거리가 먼 지식인들이 오랜 세월 민주화운동에 헌신적으로 투신해온 진보인사들을 조선일보에 기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한다고 크게 성토했기도 하였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와 같이 언론을 이용한 시민운동이 번성했던 것도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준만을 비롯한 언론개혁세력은 진보지식인의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나 인터뷰는 그들에게 공정한 언론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주어서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자신들의 수구적인 이미지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 드러내기 좋아하는 지식인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진보적인 담론을 수구들에게 말김으로서 진보세력의 영향력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무엇보다도 수구적인 그들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글과 행위를 스스로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들어서 그들의 진보세력에 대한 모략과 음해, 무엇보다 자신들과 진보세력에 대한 이중 잣대를 들이댐으로서 수시로 말을 바꾸는 뻔뻔한 태도는 일반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진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수구언론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이런 논란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건약도 역시 초기에 '웬 뜬금없는 안티조선?'이라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다. 답론을 다루는 운동단체가 일개 상품에 대한 안티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 단체에 비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언론개혁운동에 동조하게 되는데 90년대 한약분쟁을 겪어오면서 많은 언론을 대해온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침소봉대와 본질과 다른 이슈를 이용한 부당한 보도 등으로 기존 언론에 대해 상당히 많은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때는 한겨레도 우리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직접 논설 위원실을 향의 방문한 적도 있다.) 그만큼 언론에 대해서 고민을 일찍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약의 안티조선운동은 "기고 및 인터뷰 거부"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던 것도 엄연한 현실이었다.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거부운동도 벌였지만 매우 제한된 내용과 형식으로만 진행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를 하는 의약품에 대한 불매(不賣)운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 할 수 있다. 구독거부운동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물론 지속적으로 벌이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역시 구독거부운동이다.) 광고주 불매운동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선일보에서 특정한 회사이외에 의약품광고가 사라진 것은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불매운동은 무엇보다 집회장에서 하는 캠페인이나



성명서 발표와 같은 상징운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운동이기에 그 영향력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건약은 이제 단 한개의 촛불을 우리 생활 현장에서 켜기 시작했다. 이 촛불이 언론개혁을 향해 들불처럼 번지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 3. 의약품 불매운동, 약사윤리를 묻다.

우리의 논평이 나간 다음날 제약협회는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야 건강한 사회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부 약사의 주관적인 정치관과 언론관에 의해 의약품 접근성이 고의로 차단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라면서 비난을 가해왔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약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의해 환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약사의



기본 윤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은 일면 감수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선서에도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라는 내용이 있다. 건약 회원들의 참약사 선언문에도 "나는 약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모든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용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약사의 도덕적 관점과 환자의 권리가 충돌한 사건이 2005년 미국에서 벌어졌다.

미국의 일부 약사들이 창구에서 피임약 처방전을 갖고 오는 환자들에게 사후 피임약, '모닝에프터' 판매를 자신의 종교적 도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여성의 출산권과 관련, 약사들이 자신의 판단 아래 의약품 판매를 거부할 권리와 여성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매입할 권리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2006년에는 사후 응급피임약 조제를 거부한 4명의 일리노이 주 약사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이유로 미국 최대의 체인약국인 월그린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州)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양심법에 따라 약사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지, 아니면 그들에게 약사로서 의무 이행을 강요해야 하는 지를 놓고 정치적인논쟁까지 빚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보도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애리조나,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아칸소, 테네시, 조지아,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11개주에서 약사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도덕적, 종교적인 믿음에 어긋난다고 믿는 약품들의 판매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미주리, 뉴저지 등은 약사들이 의무적으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한다.

이 사건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와 그의 양심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윤리를 시험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건약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운동은 위 사건과 같으면서도 매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같은 점은 약사의 양심에 따라 의약품 판매를 거부한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응급피임약의 경우 대체가능한 수단이 없으므로 환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들이 거부하고 있는 의약품은 대체가능한 의약품이 상당수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선 회원약국에서는 미국의 모닝 에프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농촌에 있는 약국의 경우 '게보린'이외의 다른 진통제는 전혀 듣지 않는다며 고집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호소가 들려오기도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충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단골들을 경쟁 약국에 빼앗기는 빌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로도 이런 운동을 힘 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도 우리는 이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수구언론 광고의약품 불매운동은 부도덕하고 부정한 언론에 돈을 대주는 제약기업에 대한 윤리를 묻는 운동이다. 우리는



좋은 약은 좋은 기업이 정진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건강 역시 증진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운동이 단순히 의약품불매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운동을 진행하다보면 언론개혁운동이라는 본류보다는 의약품 불매운동이 더 부각될 가능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제약회사에 대한 약사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끝없는 설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판매하는 의약품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씨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한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제약회사를 설득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4. 앞으로 어떻게 할까?

촛불이 잠잠해지는 기미가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으며, 촛불의 진원지로 지목된 인터넷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 PD수첩과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벌어지고 있으며, 국회, 수구언론, 경찰, 방송통신위 등등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탄압으로 실제로 언론개혁운동이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밑바닥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잠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틀어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더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만 만들 공산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촛불이 그것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권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들어낸 촉매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 수구언론이 국민들 편에 서기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적극 보호해줄 이명박 정부가 위태롭기에 스스로 무덤을 팅 공산이 크다. 언론으로서 역할보다는 스스로 권력과 한편이 될 길을 택하는 그들에게 이명박 정권과 함께 생명을 다하게 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들 50%이상이 촛불집회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논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구독을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조중동의 신뢰도는 모두 합쳐도 일개 포털사이트보다 적다는 여론조사 보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의 영향력이 지금도 강력하다. 그것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들의 신문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황당한 거짓이라도 매일매일 노출되면 대중은 쉽게 설득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지속성은 그들의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이들 신문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습속에서 기인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그들의 논리에 반대하던 찬성하던 그들이 제공한 틀거리에서 세상을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실제로 스스로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활동가들 속에서도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은 그들을 비판적으로 본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을 통해서 가부를 본다는 점에서 자기도 모르게 수구논리에 동조하는 자신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언론개혁은 한국사회 민주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점은 누차 강조해도 부족하다. 우리는 언론이 제자리를 찾기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속에 보건의료개혁이 있으며, 그 길 속에 건강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조중동의 프레임을 걷어 차야한다. 구독거부는 그 첫걸음이다.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 인터넷언론등 대안적인 언론을 지지해야한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 언론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환경은 “전 국민이 기자다”라는 구호를 현실로 구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기록자이고, 이를 비판하는 비평가이며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다. 정보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알리미가 될 수 있다. 촛불정국에서 아고라와 블로그가 그 가능성을 증명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우리 모두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비판자가 되어야하고 때론 직접 행동으로 나설 때 이루어진다.

우리 건약은 1차 논평이 나온 지 한달 여가 되는 7월 22일 언론개혁관련 추가논평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 언론 만들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실천지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 주변에 조중동 ‘평생절독’ 선언 권유하기
2. 주변에 <한겨레>, <경향신문> ‘집단구독’ 결의 권유하기
3. 집과 직장에서 ‘조중동 없는 청정지역’ 선포하기
4. 대안언론 시민운동과 모금에 동참하기

우리가 마음만 다잡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 중에 가장 마음을 울렸던 구호로 마무리 하고자한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 질긴 놈이 승리한다.”

#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자.

회장 송미옥



7월29일 이명박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왔다.

국회 개원하기가 무섭게 한나라당 중심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감세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공공재 민영화는 없다면서 의료선진화나 공기업선진화는 차근차근하겠단다.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를 술자리 안주삼 듯 놀려대더니 언론계를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관계는 적진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꼴을 보이고 있다.

혈맹이니 전략적 관계니 미래지향적 관계니 하는 이명박 외교의 무식한 실용외교는 '동네 북' 아니 '지구촌 북'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남보다 못한 관계'로 한반도를 떠나 국제적 망신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당연히 앞으로 열거하게 될 이명박의 나라망신 꺼리가 여기서 끝날 거 같진 않다.

여기에 무슨 평가가 필요할까?

이명박의 출범에 무엇을 기대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당선되기가 무섭게 공약을 지킬까봐 무서운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초 단위 퇴임시계가 작동하는 대통령이 되어 버린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더 많이 갔다.

그래서 이명박 출범 6개월간은 이명박을 내치기 시작한 민심의 파고를 살피고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광장과 인터넷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른 평가일 것이다.

그 중심에 '촛불'이 있다.

2008년 촛불이 지닌 역사적 성과는 87년 6월 항쟁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촛불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의 목표는 단순명료하였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로 요약된 길거리 민심의 결과는 대통령직선제 쟁취라는 구체적 권력구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점진적으로





민간정부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닦아놓았다.

하지만 2008년 촛불이 가리키는 구체적 권력구조와 정치행위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명박의 퇴임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이명박의 공약은 '대운하 잠정적 포기' 외에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명박OUT' 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목표달성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생활의 정치'로 표현되는 촛불민심은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우리 먹을거리 전반의 반생태적 탐욕적 식문화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촛불정치는 일상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내는 열린 의사당이 되어야 한다.

'한국판 68혁명'으로 표현되는 촛불항쟁은 낡은 자본주의 체제를 회의하게 하고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의 체계, 대안의 문화 찾기로 나아가야 한다.

87년 항쟁의 주역으로 떠받들어진 386세대가 권위주의 정부의 끝자락에 매달려 '세계화의 뗏'에 갇힌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운동본부'가 아닌 '대책회의' 컴퓨터 몇 대로 진

행된 지도부 없는 항쟁, 축제 같은 시위문화가 이미 지난 20년의 시위 주체를 바꿔놓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더욱 더 분명해졌다.

촛불광장에 나와서도 웃을 수 없었다던 김경욱 '이렌드' 노조위원장의 말을 우리는 새겨야 한다. 수입이 끊겨 전기까지 끊긴 조합원의 방을 밝히던 촛불생각 때문에 광장의 촛불이 자신에게는 숙연해졌다던 노조위원장의 막막함을 이해해야 한다.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광우병'이라는 피켓을 웃으면서 들고 나온 일부 대학생집단의 몰감수성과 그 피켓을 보고 촛불광장이 즐겁지 않았던 에이즈환자와 그 친구들의 우울증 사이의 간극을 예리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촛불이 밝히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 파들림 현장에 촛불이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촛불의 진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촛불을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이후의 준비는 바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때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의 진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촛불의 사회적 의미, 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건약 부회장 천문호

## 1. 촛불의 원인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를 포함한) 5개월 동안의 실정이 표면적인 원인이지만 이는 단지 기폭제에 불과한 것이며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은 복합적으로 여러 측면과 경향이 섞여 있으나 그에 대한 해석으로는 경제문제를 중심에 놓고 민중생존의 문제로 보는 시각과 세대문화나 정치제도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 절차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크게 갈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필자도 이와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원인을 판단하고자 한다.

### 1) 민중생존의 문제로 보는 시각(경제 문제 중심적)

지난 20여년 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 사람은 그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커져가는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는 표면적으론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특정 현안을 둘러싼 것이지만 그 근저엔 더 폭넓은 문제, 즉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주화 이후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될 수 있는(GET AHEAD)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커져가는 분노가 있다는 시각으로 즉 IMF 이후 10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쌓여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박정희식 경제의 피해자들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촛불 집회를 주도한 계층이 학생인데 왜 거리로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에 억눌리고 교사들에게 맞지만 학교 밖으로 나오면 소비가 미덕이고, 돈을 써야 하는 소비자가 된다. 사회가 요구하는 데로

돈을 쓰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는데, 대학진학률은 이미 85%에 이르러 경쟁 참여자가 너무 많고,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총력동원 경쟁시스템이다. 잔혹한 제로섬 게임에 몰려 있는 것이며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거리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곤 한다.

### 2) 세대문화나 민주주의 절차 문제로 보는 시각(정치제도 문제 중심적)

'뉴타운' 과 '특목고' 라는 물질주의적 욕망과 대비되는 '떡거리 안전' 이라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라는 김호기 교수의 2.0세대론, 80년대는 사회의 진보와 체제 변혁을 내세웠던 변혁운동의 시대였고 90년대 한국의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시민사회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등장했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시민운동은 환경, 경제정의, 반부패, 인권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들이었지만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의제라는 점에서 이전의 쟁점들과 다르다. 2008년 촛불시위는 생활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생활정치 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이었으며 생활정치의 주체는 남성 노동자가 아니라 생활을 책임지는 가정주부라는 점에서 생활정치의 등장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를 함의하고 있다는 시각도

1) 7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아시아판에서 보도  
2)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463>  
박노자 인터뷰, 래디앙  
3) KNSI 현안진단 제124호촛불, 시위와 새로운 민주주의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있다.

또한 정치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발전과 보완적 의미로 직접민주주의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라지는데, 먼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이번 촛불집회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거리의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직접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력화 효과(EMPOWERING EFFECT)를 경험한다는 것, 즉 “직접행동에 가담하는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냄으로써 자부심과 존엄감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타인과 연대감을 고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회 때마다 거리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노래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가 이를 증명한다. 예전에 나온 노래가 아직도 애창되는 것은 우리 현실의 상황이 여전히 헌법정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제도가 헌법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헌법을 외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의정치라는 협소한 틀로 가두기 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구성의 정치’가 더 절실하며 그러기 위해 직접행동은 현실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틀을 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의 촛불집회의 의의는 인정하지만 이러한 시민운동은 정당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기반으로 하며, 한마디로 지금의 시민운동은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독한 불신에 기반하며, 이는 이중적 투표행위를 재생산한다. 이 패턴은 이명박 정부처럼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정당을 집권시키기도 하면서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으로 여권을 응징을 할 수 없을 때 국민들을 거리에서 정치하게끔 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은 국민들의 정당정치 문화의 개선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므로 따라서 문제는 느슨한 형태의 정당참여 문화를 어떻게 배양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하지 국민들의 정당참여 문화가 부재한 실정에서 정당정치의 한계를 언급하며 거리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 하는 시각이 있다..

## 2. 이번 촛불집회의 새로움과 아쉬움

### 1) 집회문화의 변화

이제 까지 집회가 사회운동단체중심의, 즉 운동권중심의 다소 경직된 집회문화였다면 이번 촛불집회는 가족단위로 촛불시위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나 전선을 쳐놓고 미느냐 밀리느냐는 문제로 치환되지 않고 잔치 혹은 페스티벌 성격이 상당부분 더해져 집회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놀이판이나 소통의 공간으로 변했음. 이는 집회자체가 예전의 조직된 대중이 다수였던 것에 비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로 인하여 문자세대와는 다른 인터넷세대의 감수성이 결합돼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 2) 자율성, 창의성의 증가

역시 인터넷의 힘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한 예로 구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내용이나 형식 등이 상당히 다양하며 특히 UCC나 칼라TV, 오마이TV, 민중의 소리



등 매체를 이용한 현장 증계 등으로 예전의 조중동 매체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었다. 즉 이를 통하여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용어인 프로슈머(PROSUMER)가 되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 3) 생활 정치의 등장

정치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인터넷 동호회들이 촛불시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먹거리 안전”이라는 단순한 생활상의 요구였으며 이들 동호회들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들이다. 이것은 경제발전이나 사회진보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먹거리 안전 문제는 잘 먹고 잘 살기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는 바로 삶의 기본을 위협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흔히 생활정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변화로 삶의 안전과 질 문제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21세기 한국정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촛불집회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집합적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시민의 힘은 향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분출될 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이 될 것이다. 아고라와 같은 인터넷 공론장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되는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인터넷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촛불시위가 확인시켜 주었다. 물론 이러한 인터넷 정당과 인터넷 국회는 선거와 같은

현실 정치에서 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 4)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영향력이 더욱더 약화

2002년 촛불시위 때는 사회운동이 한 자리를 차지했으나, 2008년 촛불시위 현장에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깃발을 만들어 나왔고 거리정치에 대한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퇴조하였다.

이는 촛불의 독자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사회운동의 무능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2002년 촛불을 경험하면서 운동진영이 학습효과를 가진 결과이기도 함.

이를 통하여 더 이상 깃발을 내세워 일방통행적인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대중운동으로 전화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대중의 바다에 뛰어 들어가 그 곳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5)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배후세력'의 부재

박노자 교수는 이번 촛불시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최대의 약점은 바로 배후세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파업이나 데모가 사측이든 정부든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을 결집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배후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그 역할을 대부분 노동당이나 사회당 같은 좌파적 진보정당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현재 진보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진보정당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서 대중들로부터 좀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침묵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퇴진, 대운하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0교시 철폐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었지만, 유독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만은 침묵하고 있는데 박노자 교수는 이의 원인을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힘이 중산층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따라서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는 (광우병, 의료민영화 등)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만 '미친 고용'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배제한다는 것이다. 촛불 집회 전체 과정을 보면 지금 단식하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나 KTX 여승무원의 요구가 촛불집회의 요구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는 촛불을 주도했던 중산층이 분산화 된 사회체제에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약자들의 연대와 조직만이 현재의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를 계급적 연대의식으로 발전시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위하여 투쟁하는 싸움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촛불 집회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다양성에 대하여 고민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는 촛불시위든, 거리정치든, 대중지성이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토론문화에서부터 사업방식, 조직과 회원에 대한 진단까지 우리 머리 속의 획일주의에서 탈피해야한다. 고민의 초점이 회원의 상태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다면 창조성은 덩으로 따라 올 것이며 선배, 후배들의 서로간의 소통이 혹시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수도 없이 자문하고 되새겨야 한다.

2) 시민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대중과 소통하기

'대중의 호민관'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대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대중이 복무할 수 있는 언어공간도 확보할 수 없고, 그들을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도 없을 것이며 이제 사회운동은 대중의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정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가 아니다. 그렇기에 갈등을 통한 충돌이 필요하며 소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내는 편견은 갈등을 회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중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 무관심과 수동성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훈련과 학습에는 ‘반드시’ 갈등이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는 암묵적인 동의나 허구적인 만장일치가 아니라 ‘능동적인 반대’를 통해서만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목소리만이 기존의 선입견과 틀을 깨고 새로운 내용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합의’나 ‘순수함’보다 ‘차이’와 ‘혼성’을 강조해야 한다.

3) 소통 방식의 변화

일회적이고 진부한 방식의 선전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한다. 이미 네트워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전략적 무기가 되었다. 이 네트워크를 빼앗기면 미래는 매우 어두워질 수 있다. 수구 보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도 자유주의자들에게 넘겨준다면 그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 성명서 하나 내고

선전물을 만드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회원들조차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예로 공공운수연맹이 만든 블로그 '공공운수 노동자'가 있는데 현재 방문자수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소식을 담은 블로그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100만에 육박하는 방문자수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이와 함께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가지 '꼼꼼'도 격주로 7만 부 발행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조합원과 연맹 소속 노조 조합원들이 직접 나누어 주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선전, 홍보 전술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적응하는 '진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촛불이 던진 변화를 읽으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정치활동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악수를 두면 촛불시위는 5년 내내 계속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사회운동과 결합하고 의식을 끌어올릴 때 (촛불시위처럼) 사회운동을 강화시키는 대중투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기존의 사고를 바꾸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실험을 이명박 정권 내내 계속 한다면 '진지를 갖는 사회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내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를 더욱더 폭넓게 사고 하기위하여 토론을 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회원과 더 나아가 대중들과 소통해야한다.



2008. 07. 31

- ☑ 공공운수노동자블로그
- ☑ 공공운수연맹홈페이지
- ☑ 공공노조홈페이지
- ☑ 운수노조홈페이지
- ☑ 부당감사 규탄 성명

#### ☑ 연맹 소식

하반기 “공공  
운수 통합산별  
노조 건설 위  
해 최선”

연맹 투본 구조조정, 사유화  
저지투쟁에 주력

연맹은 7월 30일 손기정 기  
념관에서 2차 투본(산별추  
진위) 회의를 열고 하반기



# 광전 촛불참가기

광주전남지부 엄승훈

2008년의 절반을 돌아본다.

2008년의 해가 장엄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장엄한 해는 우리를 뜨겁게 비추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출발하였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정부는 우리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지지자들은 후회를 하고 많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할 즈음에 이런 바람이 있었다. '제발 5년 후에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만 망쳐놓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바람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를 미국의 조공으로 바치고, 국민의 건강을 돈으로 팔아버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용으로 넘겨버리고, 국토를 70년대 경제로 넘겨버리는 등 나의 바람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무너져가는 바람의 한 칸에 자라고 있는 희망이 있다.

국민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었다.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보수성향이 되고 있다.' 라는 보수 신문들의 생각을 비웃기라고 하듯이 날마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02년 월드컵과 미선이 효순이, 2004년 탄핵정국 이후 국민들을 다시금 촛불축제의 장으로 모아 주었다. 이전의 운동과는 다른 즐기는 운동이 되었고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넘어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더욱 보편적인 가치로 운동을 만들어 주었다.

그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광진 건약도 역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고 의료민영화에 반대라는 기치로 서명운동도 하였다. 그리고 약사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광우병 반대 뺏지 판매도 하고 현수막 판매도 하면서 많은 약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전남대 학생들과 영화 '식코' 상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덤으로 모임 때 뵈지 못했던 많은 선배님들도 거리에서 다시 뵈 수 있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참으로 고맙다.

국민들에게 단합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진보 진영에게 새로운 운동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금 정치로 모아주고 토론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고 국민의 주권(소비자 주권까지 포함)을 다시금 찾게 해 주고, 어떤 소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해주는 등 우리 국민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었다.

현 경제상황은 제2의 IMF 라고 불리 울 만큼 안 좋은 상황이지만 촛불을 통해서 국민들은 한층 발전하였고 단합의 참의미를 알게되었다. 그 발전과 단합의 힘으로 힘든 경제상황과 이명박정권을 이겨나갈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국민들 스스로의 모습에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감동의 기쁨을 가슴에 담은채로 살아갈 것이다.

촛불야 고맙다!! 역설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야 고맙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평온이 늘 자리 잡기를....

# 대전 촛불 참가기

대전충남지부 김연희

방미 선물로 부시에게 안겨 준 이명박의 졸속적이고 위험천만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협상에 분노한 400여명의 네티즌을 중심으로 5월4일 대전 으능정 문화의 거리에서 저항의 촛불은 시작되었다.

70여일을 밝히고 있는 촛불은 대전역광장, 시청광장, 대전 KBS 방송국 앞을 밝혔고 이제 주중 동네 촛불로 발전하여 대전의 81개동을 밝히면서 함께 생활하는 동 단위 주민이 모여 광우병을 비롯한 여러 의제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토론 광장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전면 재협상을 걸고 될 때까지 모이자고 외치던 열혈시민(?)들이 줄어든 촛불의 수에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 아직도 빗속에서도 촛불을 지키고 있다. 주말 촛불로 약화되긴 했지만 고용불안, 건강권위협, 언론장악, 먹거리 안전에다 민중 생존을 위협할 한미FTA까지 시민의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촛불의 고지나 폭을 예상하긴 힘들지만 또다시 타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이 국민건강을 걸고 하는 도박의 추진내용이 폭로되거나 기만적인 꼼수로 순간을 모면해 갈 때마다 촛불의 수나 크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여전히 이명박의 막힌 귀를 뚫지는 못했다. 직접민주주의의 승리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전면 재협상은커녕 일본과 같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정도로도 얻어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어 가는 듯 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을 들고 있는 지금, 조금은 답답하고 무기력해 지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5년을 싸울 각오로 새로운 진을 짜자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지난 70여일의 투쟁을 돌아본다.

5월 2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대전지역 시민대책회의가 만들어졌고 운영위원 모두가 1약 사형태의 약국이다 보니 대중 건약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 시간에 활동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내가 대책회의에 결합하기로 했다.

지역과 전국의 투쟁흐름과 내용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지역 내 여론형성을 위해 나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참가했다.

자유발언과 각종 노래공연, 지역 극단 '중다'의 마당극 등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이명박의 실정에 대해 나름의 방식과 내용으로 분노하고 폭로하면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는 장으로써의 촛불문화제는 참가자들 서로에게 믿음과 용기와 웃음을 주었다.

맨 앞줄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빈 PET병 안에 촛불을 넣어 햇불처럼 들고 오시는 70대



할아버지, 딸이 딸의 2살박이 손녀가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나오셨다는 60대 아줌마, 유류값 인상에 물건을 배달 해도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던 50대 자영업자 아저씨, 미친 교육으로 내 물리는 제자의 삶이 안타까워 제자들과 함께 나온 40대 담임선생님, 광우병 땀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 몰래 아이와 함께 나온다는 30대 주부, 청년실업자로 제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고 다니라고 걱정하던 어머님과 손잡고 집회 나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풀었다며 소원을 이루게 해준 이명박에게 감사(?)하던 20대 청년, '0교시와 우열반, 야자에 물입교육까지. 미친 교육과 미친 소 땀에 죽기는 싫다' 사회책에서 배운 데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던 10대 여학생, "광우병 소고기 먹기 싫어요." "이명박은~ 물러가라!" 를 또랑또랑하게 외치던 유치원생들.

이들은 2008년 봄과 여름을 함께 거리에서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전면재협상" "이명박 퇴진"을 외치며 만났던 이름 모를 시민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들 석현이가 잠시 다닌 대안학교를 떠나면서 못 만났던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고 함께 하진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세상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살고 있음에 서로 뿌듯해 하며 촛불 속에서 기쁘게 술 한 잔하며 그간의 못 다한 얘기들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다.

주로 5월에는 광우병에 대한 위협을 선전하는 대중강연회나 선전활동을 진행했고 6월에는 이명박의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인 5대의제와 결합하여 진행했고 고(故)이명렬 열사의 장례와 맞물린 6/10항쟁 21주년 기념대회 때는 가장 많은 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이명박 퇴진을 함께 외쳤다.

7월에는 경제위기를 촛불 타도로 돌리며 역공을 퍼는 이명박 정권의 대책회의 대표자나 참가자에 대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촛불을 지속하려고 준비하고 정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충 건약은 6/10부터는 대충 건약의 깃발을 들고 참가했고(사진1) 6/13일 의제확산을 위한 지역 토론회에도 참가하여 의료민영화의 내용과 문제를 공유하였고 이후 6월18일에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촛불거리강연을 진행했다.

[사진1] 6월 10일. 대충건약 깃발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회원들.

그리고 6월22일~23일에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진행된 30시간 '비상시민행동' 때에는 의료민영화 10문10답을 담은 긴 플랭 카드를 만들어 대시민 여론 확산을 도모하기도 했고 영화 '식코'를 대전 시민과 함께 관람하였고 '촛불의료지원 부스'를 설치하여 밤샘 일정까지 함께 하면서 만평도 한 컷 완성했다.

또한 6월28일에 있었던 폭력과잉진압과 공안정국조성에 항의하며 진행된 경찰서 앞 1인시위(사진2)에도 제한된 시간이지만 최대한 참석하였고 일련의 시국선언, 기자회견, 서명조직, 자유발언을 통한 의료민영화 문제 제기 등 모범적으로 광우병 투쟁에 참가했다.

[사진2] 6월 28일, 폭력 과잉진압과 공안정국 조성에 항의하며 진행한 경찰서 앞 1인시위.

긴 광우병투쟁에서 손에 쥔 것은 신자유주의 강부자 이명박 정권에 함께 할 우리들의 투쟁에 함께 할 시민, 민중과의 연대와 준비된 투쟁만이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투쟁이 강고할 때 그들은 주춤하지만 우리의 투쟁이 느슨하고 틈을 보일 때 그들은 여지없이 수배와 구속, 손해배상의 탄압으로 우리를 짓밟으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동지를 지켜내고 민중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공기업사유화 저지, 언론사유화 저지,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것 같다.

투쟁 속에서만이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는 비정규직 철폐가를 마음속으로 불러 본다.

2MB 진짜 켜다! - 10대들의 이색구호로 돌아본 촛불집회

사무차장 이상호

석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번 촛불집회는 10대들의 톡톡튀는 이색구호로 한층 더 즐거웠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다. ‘단결투쟁’이나 ‘00철폐’ 같은 결의에 찬 구호나 ‘독재타도’, ‘00쟁취’ 같은 386 선배들과 달리 이 거대한 촛불을 처음으로 열어 재친 10대들의 그 신선한 구호들은 더 이상 집회가 힘들기만 한 투쟁이 아니란 것을 알게 해 주었다.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의 교육시장화를 강행 한 이명박 정부를 향해 10대들은 같은 달 19일 4.19 묘지 앞에서 학교 자율화 반대 촛불문화제로 포문을 열었다. 26일 청계천 소라 기둥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28일 촛불집회를 하자는 누군가의 제안으로 그렇게 촛불은 시작되었다. 인터넷에서는 이명박 탄핵서명이 50만명을 돌파하고 10대들의 선도로 ‘설마, 얼마나 모이겠어?’ 하며 우려하던 우리 어르신들을 이끌리듯 촛불 아래로 모이났다.

처음부터 10대들의 ‘미친 소, 미친교육 반대’라는 구호로 집회가 시작되었으니,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만이 아닌 다른 의제들도 시작되었다는 설명이 맞다. 한 이동통신 업체의 귀가 따갑게 들은 ‘...되고 송’에 말



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0교시 하면 잠못자면 되고,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리면 되고,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지면 되고~’ ... 비참하면서도 처절한 내용으로 신나게 풍자하고 있다. 여기에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라는 애뜻함으로 촛불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강부자’, ‘고소영’ 이라는 말도 기존 언론이 아닌 누리꾼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마 이때부터 이명박 정부를 향한 촛불살인의 풍자와 해학은 미리 예견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명박의 이름 이니셜을 딴 ‘2MB’ 로 MP3 노래 한 곡 용량도 안 된다는 대통령의 뇌 용량을 의심하더니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대통령을 쥐새끼에 비유하기 시작했다. 뇌가 없으니 광우병에 걸리지 않아서 좋겠다는 위안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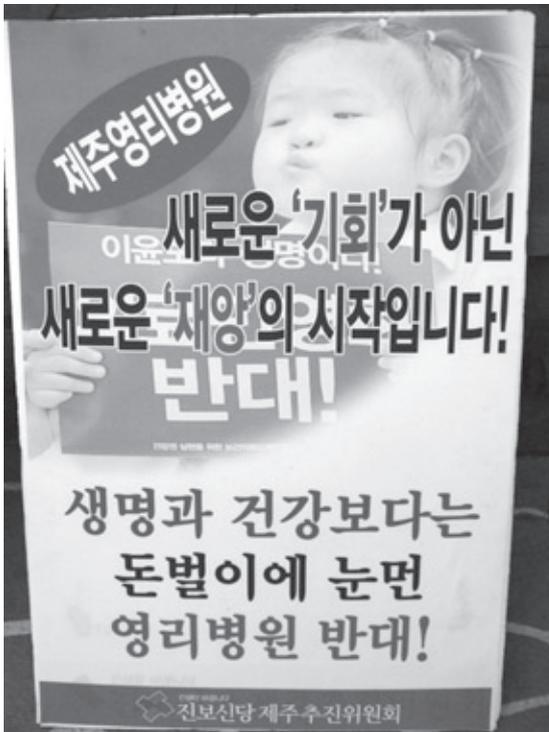
5월 말 수백 명을 연행해 가면서 쏘아대는 물대포를 향해 비웃기라도 하듯 ‘체타비’, ‘온수’ 를 달라는 대목에서는 허탈한 웃음까지 나온다. 수천~수만에서 6월 10일에는 100만 시민이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명박은 ‘명박산성’ 으로 귀를 막았고, 주인을 몰라보는 이명박을 끌어내려야겠다는 퇴진구호가 더욱 커졌다. 군화발로 폭력진압을 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는 어청수-물대포, 컨테이너 관리청이라는 새로운 경찰의 임무를 부여해 주었다.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광우병 괴담’, ‘인터넷은 독’ 이라는 이명박과, 이를 열심히 퍼 나르는 조중동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에게 ‘친북반미’ 세력의 선동이라며 배후세력이 있다고 난리를 쳤다. 배후세력 운운하는 말에는 ‘배후는 양초공장과 이명박’ 이라는 말로 응수했다. 촛불의 규모에 따라 반성도 했다가 물대포도 쏘다가 하는 이명박과 리듬을 맞춰가며 언제는 촛불의 진정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다가 다시금 폭력시위의 배후를 찾아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는 비겁한 조중동의 행태에 누리꾼들은 ‘오늘의 숙제하기’ 를 통해 초유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맞섰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조중동의 왜곡이 만천하에 다시 들어난 셈이다. 특히 나는 이번 조중동 불매운동에서 ‘항의하기’ 라는 말을 ‘숙제하기’ 로 표현한 그 위트를 촛불집회 최고의 히트작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10대들의 통렬한 비판에 우리 건약은 이명박에 빨간 약사들의 맘으로 ‘미친소엔 약이 없다! 2MB에겐 퇴진만이 약!’ 이라고 화답했다. 이명박이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들으며 그토록 빠져리게 깨달았다는 ‘소통’, 그 소통이 부재한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풍자와 해학이 넘쳐난다고 했던가. 서민들의 풍자로 가득한 ‘춘향전’ 과 같은 소설이 유행했던 조선시대의 양반 계급사회로 돌아간 것일까? ‘청와대에 인터넷 놔 드려야겠어요..’ 라는 여고생의 말처럼 청와대에 초고속 인터넷을 놔 주면 이명박은 정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 무더운 여름날까지 뜨거운 촛불을 들게 만드는 이명박... 정말 찼다, 찼어!!(심하다)

# 이명박 정부에서의 의료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정책실장 신형근



## 1. 들어가는 말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는 2008년도 새롭게 등장한(또는 새롭게 재해석된) 신조어이다. 그동안 의료서비스 산업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의료 사유화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의료의 공공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료의 민영화가 대중들에게 인식된 것이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료민영화라는 슬로건이 적합한 개념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은 현재 대중들에게 의료민영화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가오기에 여기서도 의료의 공공성과 반대되는 의미로 의료민영화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실 의료민영화의 흐름은 참여정부 시대부터 있었던 흐름이었다. 2004년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2005년부터 본격화된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대변되는 흐름이 있어왔으며 2007년도에는 제3자의 알선과 소개를 허용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확장해주고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이 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의료민영화 흐름은 보건의료운동진영의 줄기찬 반대와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장상의 약화와 건강보험의 위기, 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되어온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가속화가 예견되던 상황이었으나 다수의 대중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은 우연하게도 인터넷상에서 시작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반대청원을 계기로 급속하게 확산되어갔고 정부는 현재까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나타난 정부의 해명과 그 이후의 조치를 보았을 때 정부의 주장은 요즘 표현대로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라는 인식하에 나온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번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움직임을 볼 때 여건만 조성된다면 이름만 달리한 형태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 2. 이명박 정부하의 의료민영화 전개과정과 문제점

### 1)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 위상을 둘러싼 현황

이명박 정부 출범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으나 언론 등을 통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포함한 당연지정제 완화의 내용이 흘러나왔고 재경부 보고(현 기획재정부)등을 통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인수위의 활동 속에서 나타난 공식입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의료서비스 산업정책 계속 추진이었다. 이미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명박의 당선으로 의료의

민영화가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건강보험의 축소,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그리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정책이 초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민간보험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는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실천방안을 2008년 3월10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3자에 의한 유인, 알선 행위를 합법화하여 민간보험회사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밝혔으며 손해보험회사가 주도해왔던 민영의료보험에 생명보험회사의 진출을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품출시에 대한 규제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유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2003년 삼성생명의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단계를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사보험간 공유할 수 있게 하며 공보험 데이터 활용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겠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재경부 시절부터 현재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부처에서는 공.사보험의 정보공유가 가능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이윤이 주목적이고 개인의 건강상태와 재력에 따라 보험 가입요건과 대우가 틀리기 때문에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과거 암을 앓았던 자, 비만인자, 저체중자, 만성질환자 등은 보험가입 자체가 원칙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이고 미국과 같은 보험제도로 재편된다면 국민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

협회가 사람을 선별하여 선택하는 재앙적인 상황이 오히려 자명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출범 후에 건강보험의 미래를 미국 형으로 갈 것인지 네덜란드 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움직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덜란드의 충분한 보장성 제도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체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다.

### 2)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과 문제점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의 제도적 차이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진다. 주식과 채권 발행이라는 제도 변화보다는 수백조 원대의 부동산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유입되는 메커니즘이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설립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틀 밖으로 나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고급화론이다.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시설과 서비스가 고급화되고 의료인들이 보다 친절해질 것이라는 점이 핵심 논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우리도 태국처럼 의료관광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장이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의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들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서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우리도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의료'를 매개로 한 지역 발전론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이들 지역에 예외적으로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 주었다. 최근까지 외국병원 유치실적이 부진하자 드디어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고 치료성적도 좋지 못하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 번 증명되었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에 질적 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일부 있지만,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 여러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2만 6000개 병원과 3,800만 명의 환자를 비교했을 때, 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이 2%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가 영리병원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진료 인프라 이외에도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설립 목적 상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로즈나우(ROSENAU)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병원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논문 149편을 엄선하여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자선사업 등을 비교한 결과 88개 논문(59.1%)에서 비영리 병원이 우수하며, 18개 논문(12.1%)만이 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영리법인 방향으로 선화하고 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MSO(병원 경영지원회사)이다. MSO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나 병원과 민간자본의 고리역할을 수행하고 완화된 영리병원 허용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MSO를 통해서 의료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이 활기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인터넷 전문지를 통해서도 MSO에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둘째로 병원의 부대사업범위를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부대범위에 대한 지정을 시행령으로 넘겨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MSO이다. 그 외에 외국인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민간보험사에게 허용하는 것과 병원간의 인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외국인환자 유인, 알선 허용은 차후에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사전적인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병원간의 인수 합병은 대형병원 중심의 질서재편을 예고한다고 보면 된다.

### 3.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영리병원 도입의 주된 논리는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델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의료관광형태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중론이다.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 성공한 것은 '영리병원을 통한 고급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한 탓이기 때문이다. ILO 자료를 기준으로 2003년 한국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를 100으로 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 불과한 실정이다. 개도국의 우수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부여하여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소외계층이 태국을 찾고 있다. 미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미국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존 의료관광 활성화 담론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의료관광 시장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탓이거나 아니면 '영리병원 허용'론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악용한 탓일 것이다. 동남아 의료관광 성공의 비결은 자국의 우수 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 장비를 구비하게 하여,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부대비율을 무기로 미국의 의료소외계층과 동남아 부유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데 있다.

이 동남아 모델은 국내에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동남아 국가와 현 건강보험체제에서의 한국 의료비를 비교해보자. 국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환자 비급여 비율을 고려해서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 주요 시술 비용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태국, 싱가포르의 진료비에는 항공료, 병원 치료비, 호텔 숙박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이들 나라의 영리병원 병실의 대부분이 1인실임을 고려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국내 병원에서 이들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보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가 2-3배 이상 급등할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진료기술이 더 좋다고 차별화하기 쉽지 않다. 시설, 장비, 진료수준에서 우리나라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시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듯이 3단계 제도개선안을 통해 제주도에 기어코 영리병원을 세우려 하고 있다.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의 주된 내용을 보면 외국병원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영리병원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 검토, 영리병원에 대하여 재무제표 제출 의무 생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민영화 모든 정책을 제주도에서부터 시험해 보겠다는 뜻이고 제주도를 국내의 모든 자본에게 개방하겠다는 전면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영리병원 허용이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항이다. 제주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은 곧 전국 강원도를 제외한 6개 지역에 이미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그 법적 근거가 동등하여 제주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은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게 되며 그 결과는 진료비 상승으로 인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수많은 서민의 건강의 직접적인 위협이다.

#### 4. 맺으며

이미 여러 지표와 증거, 경험들을 통해 의료의 민영화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나 보장성이 아직까지 취약하여 건강의 책임을 상당부분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후퇴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는 기회가 닫는 데로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원하는 기득권자의 돈벌이를 위해 제도 추진을 강행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 반대, 민간보험 활성화 반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의 의료민영화

반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보건의료단체 연합 성명서 '의료민영화가 시작됐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라!'
2. 시민건강증진 연구소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
3. 박형근 교수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4. 의료민영화 재안인가 - 민주당 토론회 자료집 '의료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최근 소식-제주도민의 힘으로 영리병원 도입 막아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둘러싼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2%로 반대의견이 더 많아 영리병원 도입정책이 중단되었다. 제주도청은 소방서직원까지 총동원하여 10만 명이상의 도민들에게 대면작업을 통해 영리병원 홍보활동을 하고, 도내 전역에서 임시반상회를 열어 일방적 홍보활동을 벌인 직후 일방적 여론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런 일방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허용 반대였다.

제주도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의료선진화(의료민영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한 것이지만 개인질병정보 공유 등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